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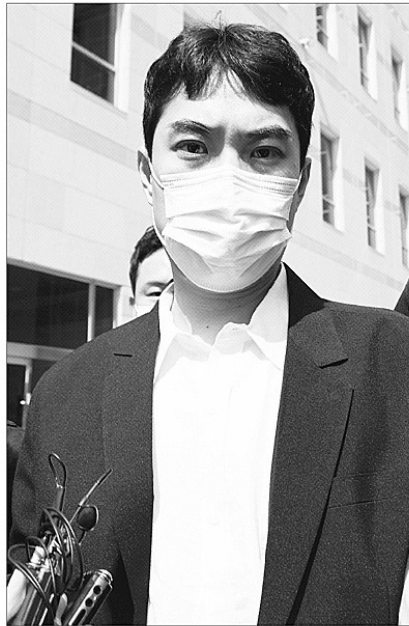
‘무자본 갭투자’ 699억 전세사가… 2심도 징역 15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유죄
‘보증금 반환 불능’ 고의 인정
직원 2명 7년4개월·7년 감형

신속 빌라를 매입하는 동시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수백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9-3부(재판장 최보원 항소심장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돼 형량이 줄었다.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속 빌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동시에 그보다 비싸게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했으나 부동산 사세 하락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처음부터 세입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2명도 김씨와 불법적인 목적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 등이 택한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 사업 구조에선 신규 입차인 유입이 단절되면 구조적으로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측은 전세 계약에 맺을 때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사업가로서 보증금을 반환받

는 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입차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씨는 세입자에게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세입자가 돈을 더 내고(집을) 매수하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라”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1심은 A사가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역할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시진행 거래 구조의 본질상 신규 입차인 유입이 단절되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한 위험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강화나 부동산 시장 변동은 예견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영장심사 출석
영장심사실에서 30일 오후 영장심사실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경찰을 빠져나와 출퇴근에 오르고 있다. /영남뉴스

사고 후 ‘술 타기’ 주장한 40대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유죄

법 “사고 후 음주 인정 안해”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에 대해 2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장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시엔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경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2시간30여분 전인 오전 2시19분경 세종시 부모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에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오전 3시14분경 직접 112에 “차량이 고립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당시에도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한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 신고했다는 A씨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있는 만큼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계약 끝났어도 ‘부당해고 복직명령’ 유효”

大法, 미이행 업주 벌금형 확정
“사용자 계약갱신 기결 효력 불”

노동위원회의 원칙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 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1월 영업사인 A씨의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당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해명한다고 판단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

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고, 복직명령은 2022년 6월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이미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돼 복직이 불가능하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A씨와의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복직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조씨가 실질적인 복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조씨는 A씨에게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 등을 요구했으며, 실제 영업활동에 필요한 판매카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복직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정당할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복직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칙 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코인 맡기면 고수익”… 123억 가로채 잠적

20대등 사기 일당 3명 검거
가짜사이트 만들어 투자 유도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하면 매일 고정된 이자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해 123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사기 등 혐의로 남상 A씨(29)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이 B씨(29)는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C씨(34)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의 채류 중인 주요 공범 D씨(29)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적색 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5년 10월 16~23일 ‘Expintwork.com’이라는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라플’ 코인을 맡기면 매일 1.5~1.8%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1명으로부터 123억원 상당의 리플 약 340만개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투자를 유도하는 거짓 정보를 게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리플 코인을 A씨 일당이 안내한 대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특정 지갑으로 전송하자, 사이트가 폐쇄되고 A씨 일당은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두세달 입원할 정도로” 친고모 폭행 의뢰

30대 구속… 직장갈등으로 범행
중간연결책·폭행가담자등 6명도

고모에게 보복하기 위해 정부 폭행을 의뢰한 30대 남성과 실제 폭행에 가담한 일당 등 7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정부 폭행 연絡책과 실행자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을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고모이자 60대 여성인 C씨와 업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폭행을 통한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모인 B씨에게 “돈을 쓸 테니 고모를 폭행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과거 직장 동료인 D씨에게 범행 실행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D씨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태 후배 등 4명을 모집했다. 이

들은 폭행 계획을 세운 뒤 지사, 망포기, 폭행 실행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착수했다. 폭행 대가는 8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A씨측은 실행에 앞서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6월24일 의정부시에서 귀가하던 C씨에게 남성 2명이 접근했다. 한 명은 주변을 살피고 다른 한 명은 C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혔다. 폭행 사건 이후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사전 계획된 보복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또 과정에서 A씨가 폭행을 지시하고, 중간장책을 통해 실행자를 모집한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이 확보한 일당의 메시지 대화에는 범행 수위를 논의한 정황도 담겼다. 이들은 “2~3일 정도 입원 사이즈”, “얼굴 때려라” 다른 뜻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지역농협 선거서 수천만원 뒷돈거래 시도

후보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 사비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후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합소9부(재판장 송인철 판사)는 농협동맹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징

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당시 선거에서는 비상임이사 4명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총 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들 사이에서

1명이 가진 사비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A씨 등 3명은 사비 의사를 밝힌 B씨에게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자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B씨가 사비 의사를 철회하면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울산=최정진 기자 look7760@sinimilbo.co.kr



희망을 선순환합니다

善

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캠페인
→ 만원릴레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fund.inu.ac.kr

032-835-8080

